

※ 논의 중인 초안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변경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1년 10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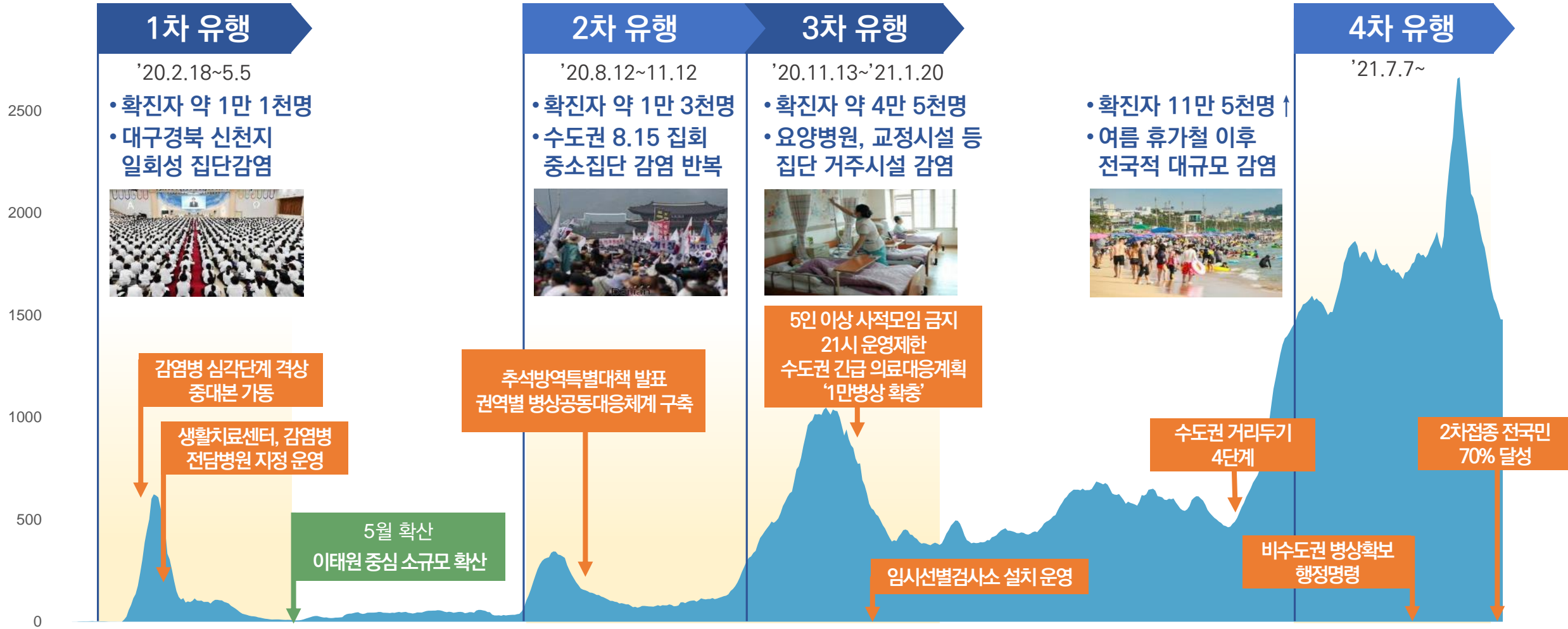
- I 대응 및 평가
- II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 III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 IV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 V 의료·방역 대응 추진방향
- VI 향후 계획

I

대응 및 평가



'20.1.20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4차 대유행 진행 중



【참고】 코로나19 대응 경과

'20.1~3월



초기 기반 구축
1차 유행 대응

위기 경보 격상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사회) 개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방역) 특별입국절차, 진단시약 긴급 사용,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
(의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20.4~10월



대응체계 보완
2차 유행 대응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재정비
(방역) 질병관리청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법령 정비
(의료)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체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20.11~'21.2월



대응체계 개편
3차 유행 대응

(사회)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방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요양병원·시설 대응 강화
(의료) 수도권 1만 병상 확충, 특수 전담병상 운영



'21.3~'21.6월



예방접종 실시
4차 유행 대비

(접종) 요양병원·코로나 치료병원 부터 순차 시행
(사회·방역) 감염취약집단 추가발굴·선제검사
(의료) '4차 유행억제 및 대비방안', 日2만명 대응 의료체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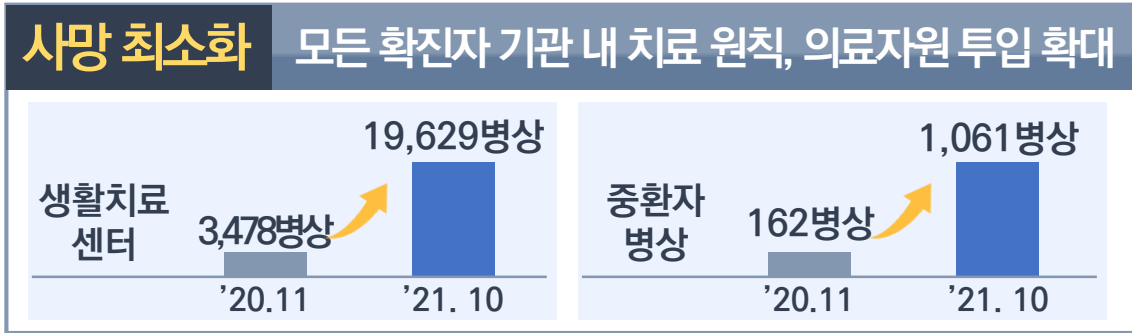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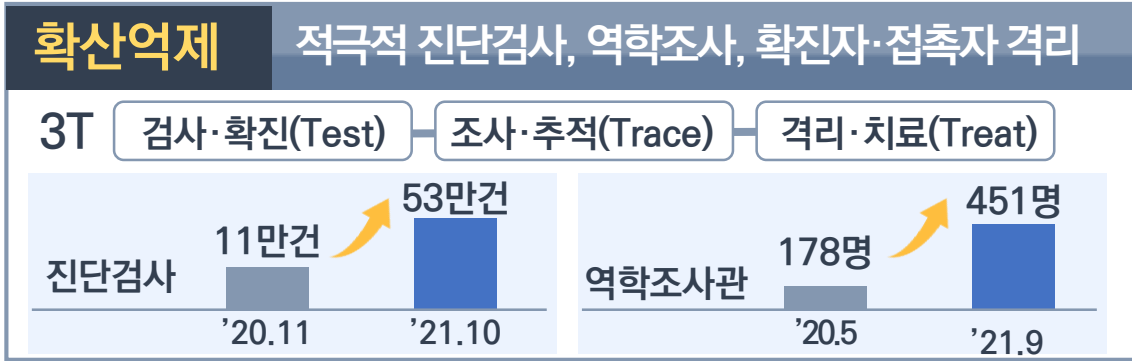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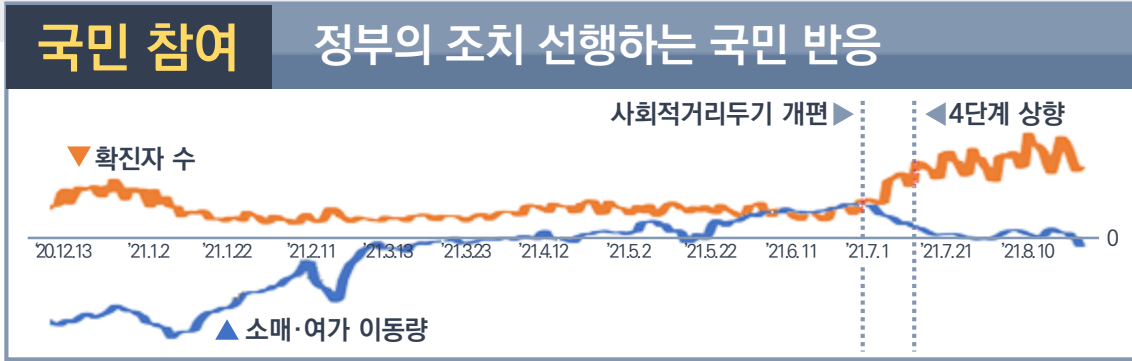
'21.7~

예방접종 지속
4차 유행 대응

(예방접종) 1차 전국민 50% 달성(8.22.)
(사회·방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 운영
(의료) 수도권(8.13.)·비수도권(9.10) 병상확보 행정명령, 생활치료센터 확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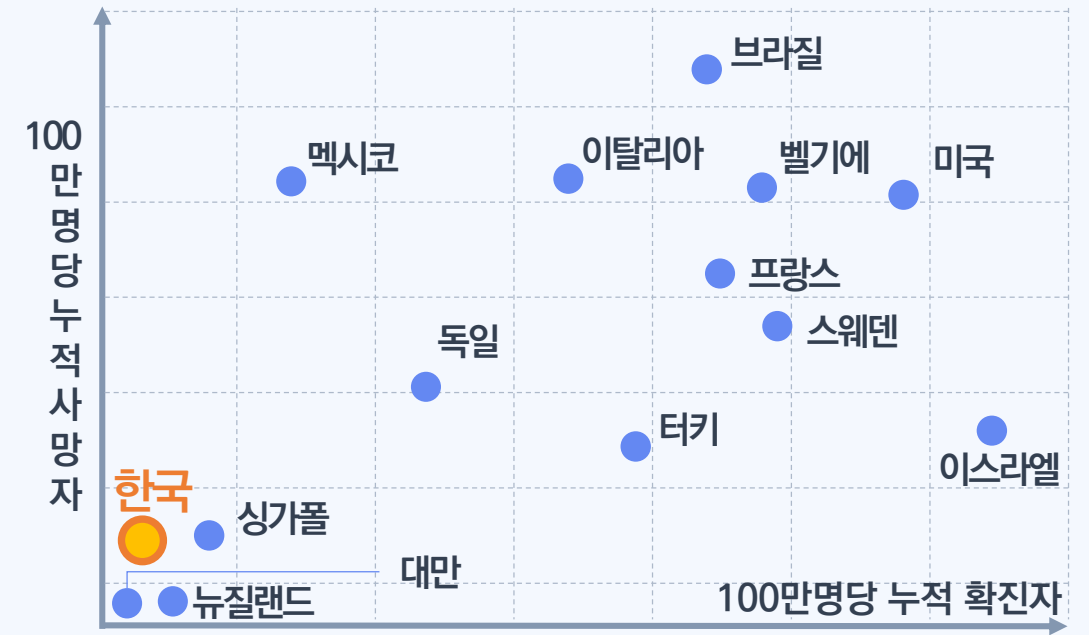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3T 전략 등으로 건강피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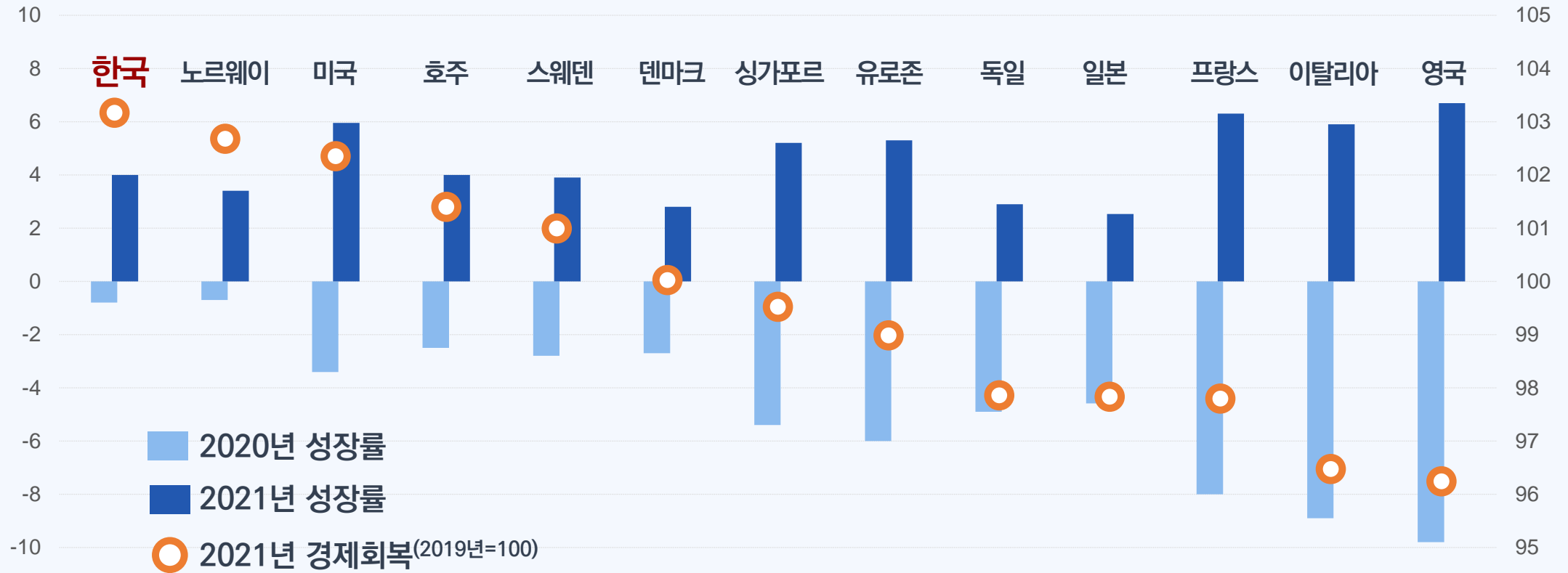


세계 최저 수준 확산과 건강피해 최소화

• 인구 100만명당 환자 6746명, 치명률 0.78% (10.20기준)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회복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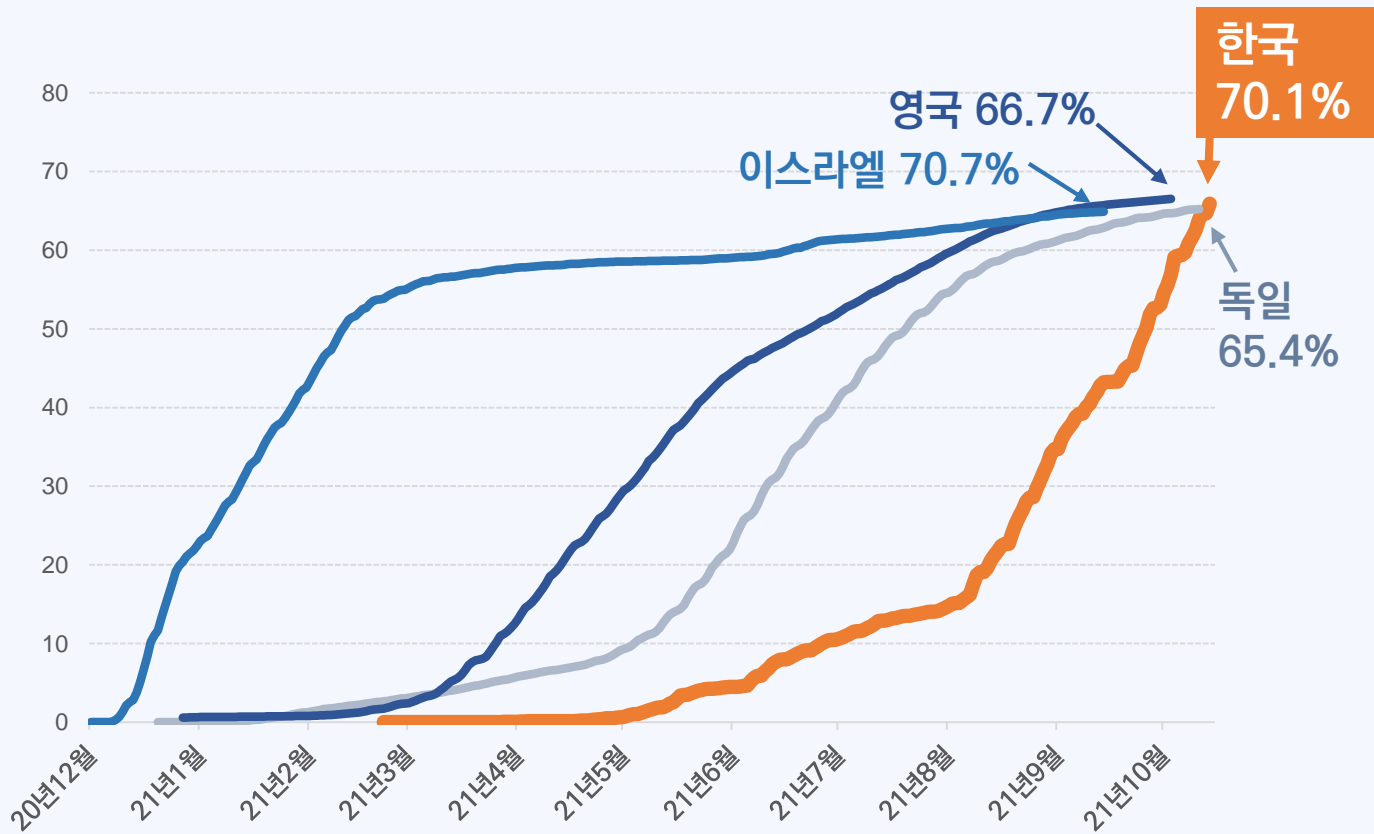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21.9)/IMF World Economic Outlook('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박사

(10.16~22) 일 평균 45만명 접종, 국민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



주요 국가 일자별 예방접종율 비교



The New York Times

How Asia, Once a Vaccination Laggard, Is Revving Up Inoculations

About 0.6 percent of fully vaccinated people who contracted Covid had.....
"Asia was always going to use vaccines when they became available."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지난 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예방접종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

- 뉴욕타임즈('21.9.30)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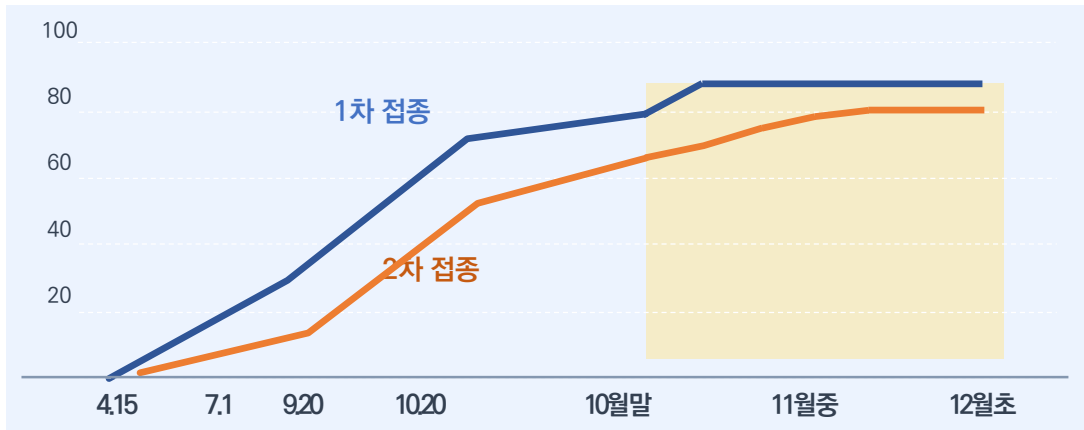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필요성



예방접종률 향상, 방역 전략 수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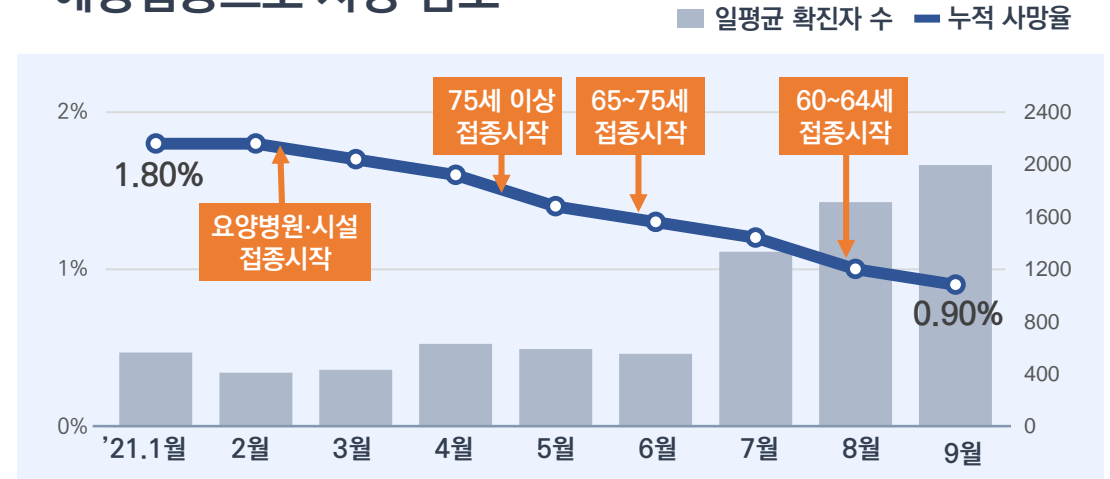
예방접종률의 상승

• 9.17 1차접종 70%, 10.23 2차접종 70% 달성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 가중



자영업자 등 피해 누적, 사회경제적 부담 심화

- 경제, 교육·돌봄 등 각 분야 피해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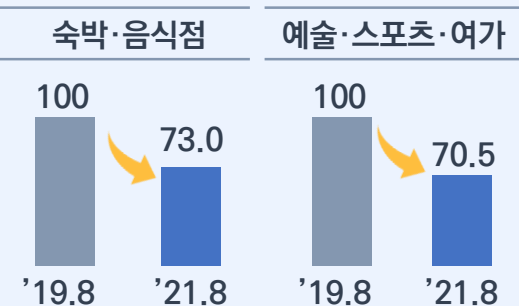


연간 약 8% GDP 손실
월 약 13조원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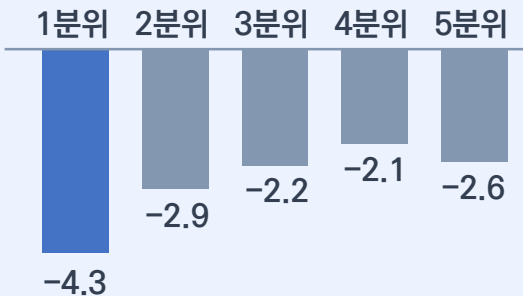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시, 한국은행

-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부담 심화

'19년 동기 대비 소상공인 매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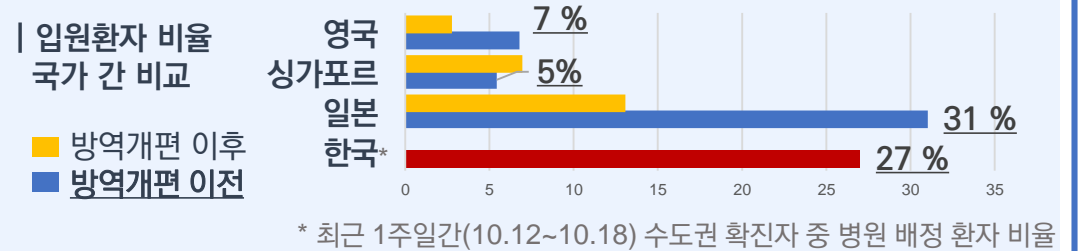


1개월 봉쇄조치 시 소득분위 별 연간 임금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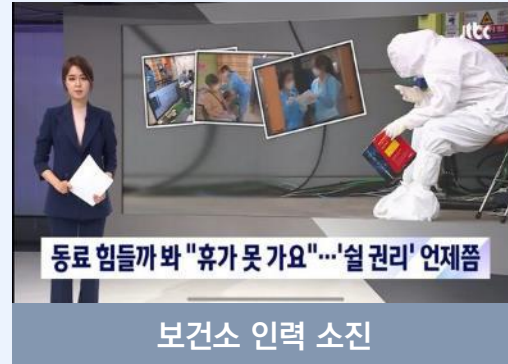


의료인 '번 아웃', 의료체계 부담 가중

- 코로나19 대응 위해 의료자원 집중 투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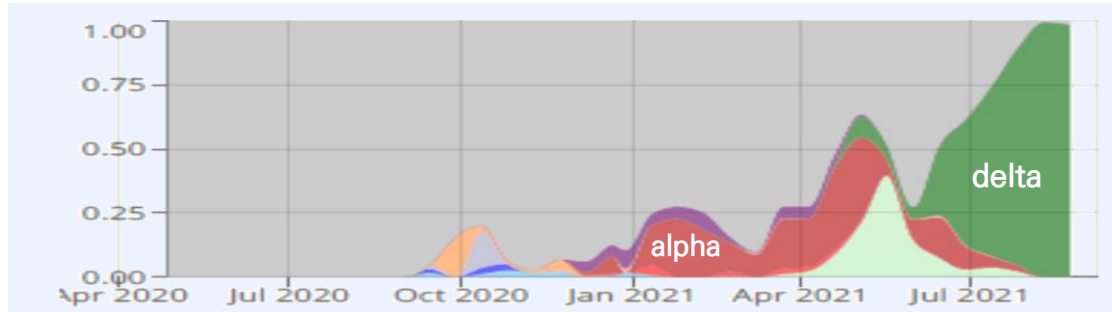
- 보건소 대응인력, 의료 인력 '번 아웃'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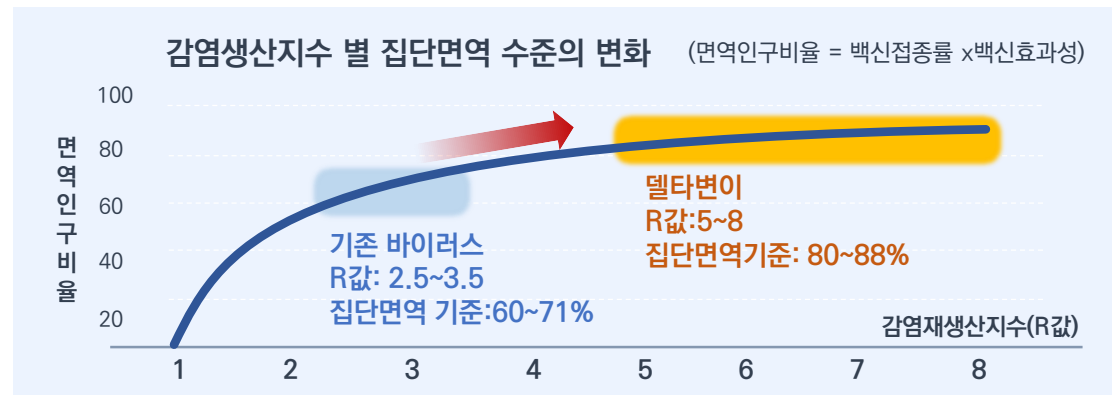
델타 등 새로운 변이의 위협과 약 1,100만명의 미접종자

전파력 높은 델타변이 확산

- 델타변이 빠르게 증가, 우세종 化(99.5%, 10.22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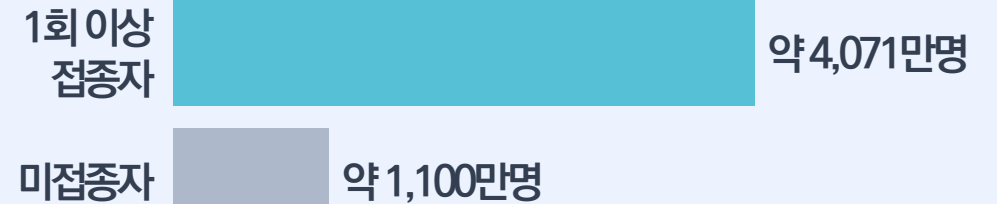


- 전파력 2~3배 이상, 집단면역으로 퇴치 종식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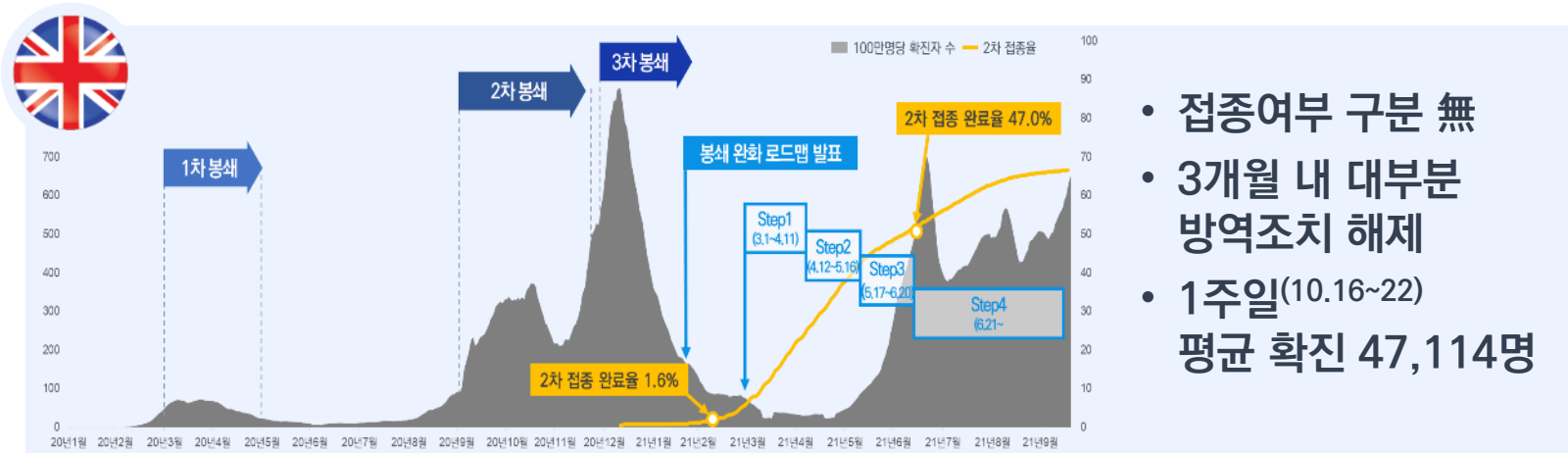


감염위험도 높은 인구군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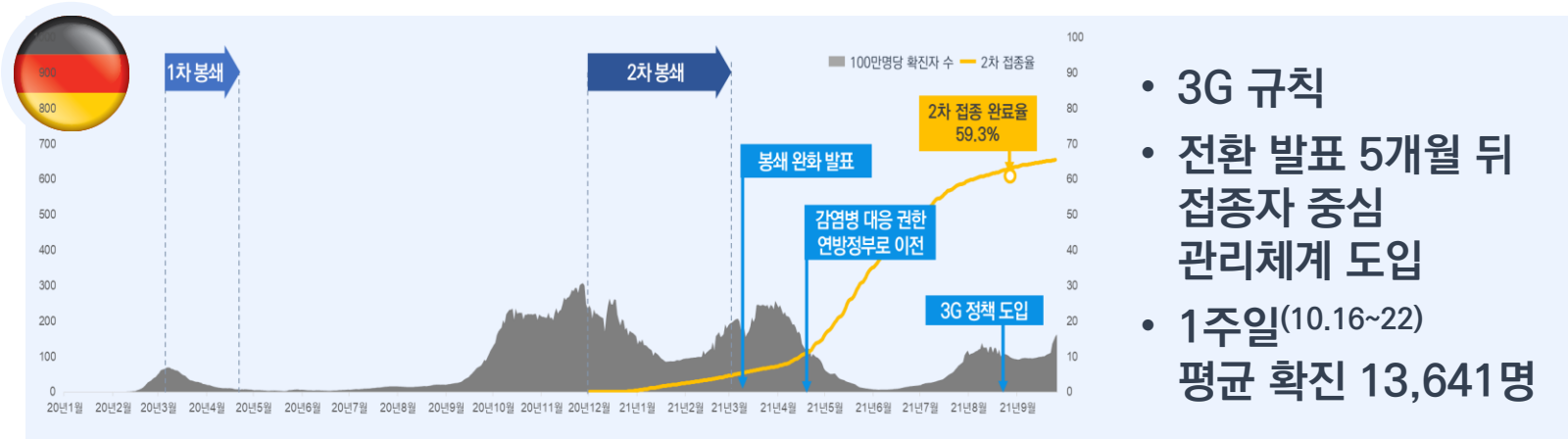
- 예방접종완료 70% 달성하였으나 미접종자는 1,10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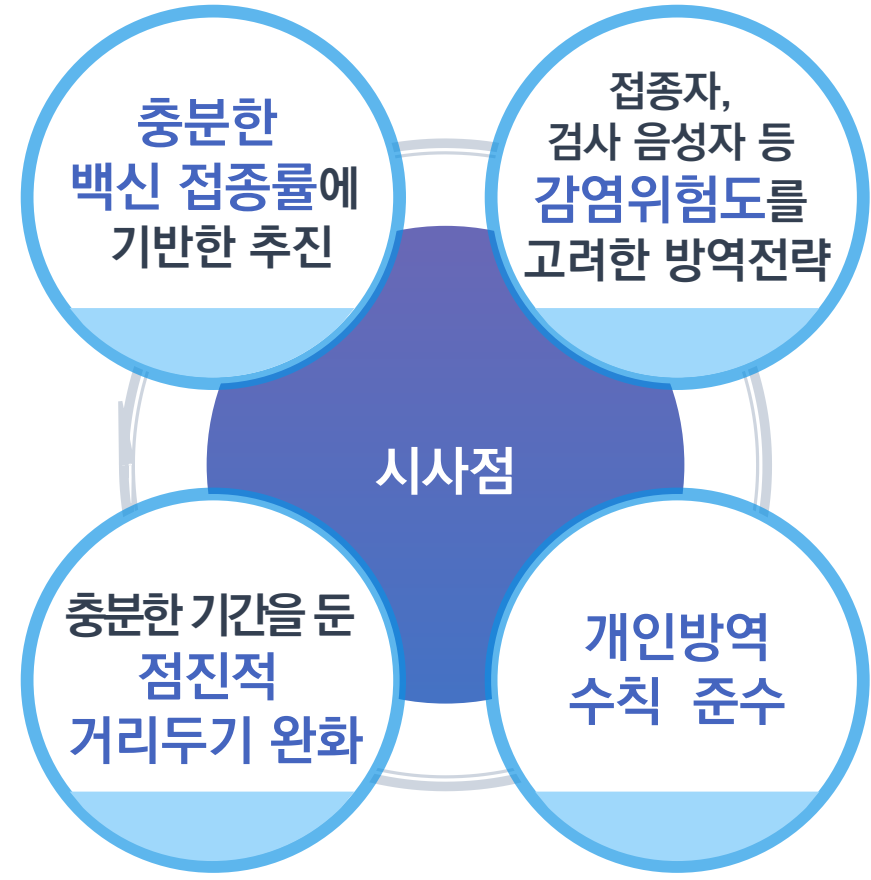
선행사례 분석 시 감염 위험도 고려한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추진 필요



- 접종여부 구분 無
- 3개월 내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
- 1주일(10.16~22) 평균 확진 47,114명



- 3G 규칙
- 전환 발표 5개월 뒤 접종자 중심 관리체계 도입
- 1주일(10.16~22) 평균 확진 13,641명



Ⅲ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The Better Korea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방역
의료

경제
민생

사회
문화

자치
안전

‘점진적·단계적’ 회복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포용하는’ 회복
‘모두 행복한’ 일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함께 만드는’ 일상으로

IV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경과

'20.2.29. ○ 사회적 거리두기 최초 도입

'20.6.28. ○ 단계별(3단계) 전환 기준 및 조치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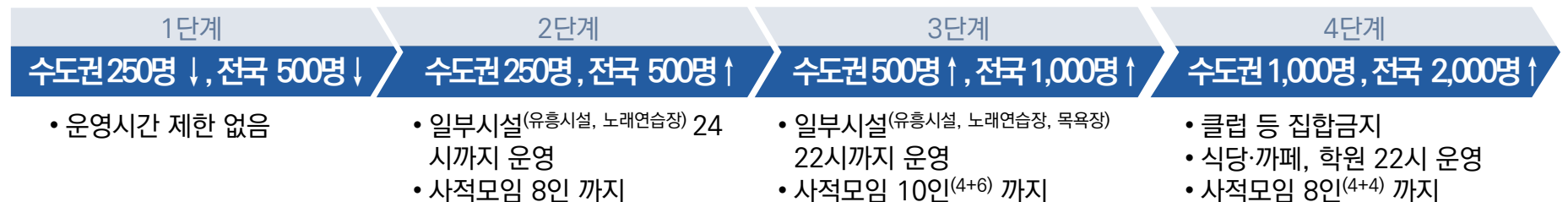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발생 수준(1→2단계), 급격한 대규모 확산(2→3단계)

'20.11.7. ○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3→5단계), 시설·활동 위험도 별 방역수칙과 권역 별 대응 강화



'21.7.1. ○ 단계 간소화(5→4단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

* 체계적 분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리원칙 수립, 지자체 자율성과 개인활동 관리 강화



② 개편 논의 경과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각 분과에 거리두기 개편방안 공유(10.18.)
- **[생활방역위원회]** 접종완료자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 동의(10.19.)
- “생업시설 규제완화, 국민 생활 전반으로 논의 확대 필요”
- **전국 시·도, 관계부처에** 거리두기 개편 의견수렴(~10.20.)
-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10.21.)
* 유흥시설(식약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문체부), 목욕장업(복지부), 경륜·경정·경마장(농림부), 카지노(문체부)
- **제2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향 논의(10.22.)



③ 총괄방향

중증·사망 발생 억제

확산 억제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

1 단계적 완화³차례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2 접종완료자 중심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3 일상 속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4 비상계획 수립

의료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④ 단계적 완화^{3차}레 추진

전환시점과 기준

전환
시점

11월 1일 부터
체계전환 운영 4주 + 평가 2주 간격

전환
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전국적
통합
정비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 1단계 지역 별 수칙 해제,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정비**
- 개편 시 마다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

지자체 자율 결정

- **지자체에서** 지역 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조치 가능**
- 완화 시 권역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3차레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가 다중이용시설 - 운영 현황

☑ 행위 특성과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3그룹으로 분류, 단계별 운영시간 제한 시행 중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방역조치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
1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펍게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시 운영제한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시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시 운영제한 24시 식당카페
3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 /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내국인) /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시 운영제한 24시 영화공연, 독서실, 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없음

가 다중이용시설 - 추진방향

- ☑ 일부 고위험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며 방역 제한조치 해제
- ☑ 그 외 시설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며 방역 제한조치 해제

고위험 시설^{1차 개편}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식당·카페

사적모임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싱가포르: 식당 등은 접종자·검사^{PCR}음성자 만 출입 허용, 카페, 실외식당은 접종 관계없이 2인 허용

그 외

기본 수칙 유지, 그 외 방역 조치 최소화

접종완료자 등 만 이용 시 인원, 취식 인센티브 적용

가 다중이용시설 - 세부완화방안

		기 존		개 편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비수도권	22시/24시 제한 제한없음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2그룹	식당, 카페	수도권 비수도권	22시 제한 24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2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비수도권	22시 제한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3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22시 제한	24시 까지 완화* *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목적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미접종자 감염 확산 예방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 허용

대상

감염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 고려

① 접종완료자 ② 검사음성^{PCR}확인자
(예외) 아동청소년,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적용

일부 다중 이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집회

| 단계별 적용

1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2차 개편

•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 해제

3차 개편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해제

검토기준

- 시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 환기 불충분, 2m 거리두기 어려운 실내

검토결과

- 시설 및 활동 위험도 기준 다수 충족
- 감염관리를 위해 위험도 낮출 필요 높은 일부 시설에 적용 검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등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예외

- 시설 별 이용 필수성 및 위험도 고려, 미접종자 예외 범위 설정

① 검사음성PCR확인자 ②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적용 및 해제

- 1차 개편 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
- 시행 후 효과평가하면서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 검토

혜택

- 인원제한 등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
 - 시설 내 취식금지 등 고위험 행위는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해외사례

	한국(안)	프랑스 보건패스	이탈리아 그린패스	독일 3G	덴마크 코로나패스	캐나다 백신여권
무도장/콜라텍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목욕장업	○	-	○ (스파)	-	-	○
경마/경륜	○	-	-	-	-	○
카지노	○	○	○	○	-	○
문화공연	-	○ (50인 이상)	○	○	○	○
스포츠관람	-	○	○	○	△ (축구장)	○
교육, 문화, 예술	-*	○	○	○	-	○
일반음식점	-	○ (전시회, 컨퍼런스)	○ (어린이 교육센터 제외)	○ (행사, 콘서트)	○	○ (행사, 파티, 워크샵)
의료시설	○	○	-	○	-	-

* 100명 이상 모임·집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예정

다 기타수칙 간소화·해제

인원제한

1차 부터

-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 현장 수용성 제고
*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

3차 부터

- 인원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
*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복잡한 단계 별 시설 별 인원 기준 통합 정비”

취식 제한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 마스크 벗게 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해보고 결과 평가

수칙 간소화

- 단계별·시설 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
-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 식당·카페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별 방역수칙 통합정비 및 단순화

라 행사 및 집회



행 사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개편방향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1차 개편

100명 미만

허용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 허용

(시범운영) 500명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할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 평가

* 대중공연, 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지자체 축제(행안부) 등

(경과조치) 100명 이상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종전 수칙도 인정, 2차 개편 시 통합

2차 개편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없이 가능**
- **장소 별 목적 별 복잡한 행사 수칙* 원칙을 통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라 행사 및 집회

행 사

100명 미만 행사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
 100명 이상 행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미접종자 +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 제한 해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	3단계 50명 미만	5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 제한 無 대규모 행사 가능	기본 방역수칙 준수

- 1차 개편시 예외적용
 결혼식, 박람회 등 접종자+미접종자 혼합이 가능했던 행사 및 접종완료자 등으로
 500명 이상 구성된 임시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마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 3차 개편 시 해제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p>모든 다중 이용시설</p> <p>수도권 4명+4명 비수도권 4명+6명</p>	<p>접종구분 無</p> <p>사적 모임 10인 까지 가능</p> <p>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p>		<p>제한 해제</p>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바 일상영역, 감염취약시설

종교

- 정규 종교활동 확대, 고위험 행위 단계적 완화
대면예배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학교

- 대면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교육 결손 회복 추진

사업장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적정화
- 위험사업장 자율방역, 환경개선

군

-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 일상회복

감염 취약 시설 보호

감염 시 사망 위험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접종 완료자 중심 이용

- ①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 ② 미접종직원·간병인력 주1회 PCR검사 의무화
- ③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

사 일상 속 방역 실천

☑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

기본 방역수칙

핵심수칙 의무화

- 실내 마스크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 * 마스크
- 1차 개편 시 현행 유지
 -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

자율 준수

자율 방역 유도

- 핵심수칙 위주 홍보
- 관련 협회단체 자율적 노력 유도
- 다빈도 위반 집중점검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 지역 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지역 자율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 별 방역조치 강화
-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아 비상계획 수립

비상계획 주요 목적과 기준

목적

- 일시적인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 안정화, 일상회복 지속

검토 기준

- ①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80%)
- ②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 ③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검토 절차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 주요 조치(안)

미접종자 보호강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개인 간 접촉

- 사적 모임 제한 강화
- 행사 규모·시간 제한

취약시설 보호

-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 종사자 선제검사

의료대응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기 존 수도권 기준	개 편
음식점, 카페	매장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관람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음료 허용
헬스장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접종 구분 無 정원의 50% 관람, 응원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 관람 가능
기념식 각종 행사·집회	개최 불가	접종구분 無 100명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친구, 가족 모임	8명 ⁽⁴⁺⁴⁾ 까지만 가능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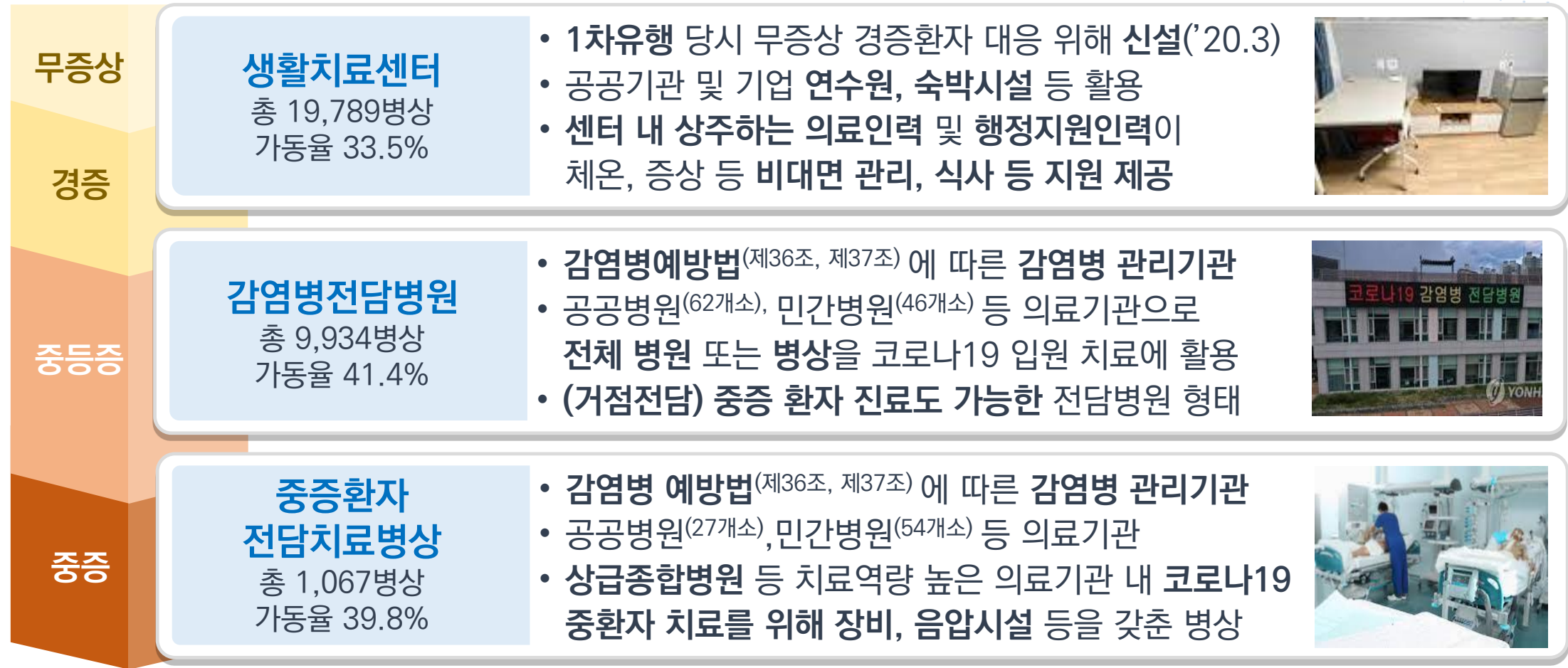


의료·방역 대응 추진방향



① 의료대응 현황

* 10.23 기준



병상기준 감당 가능 확산규모

생활치료센터 2,831명, 중등증 병상 4,082명, 위중증 병상 4,087명
확진자 발생 시 까지 감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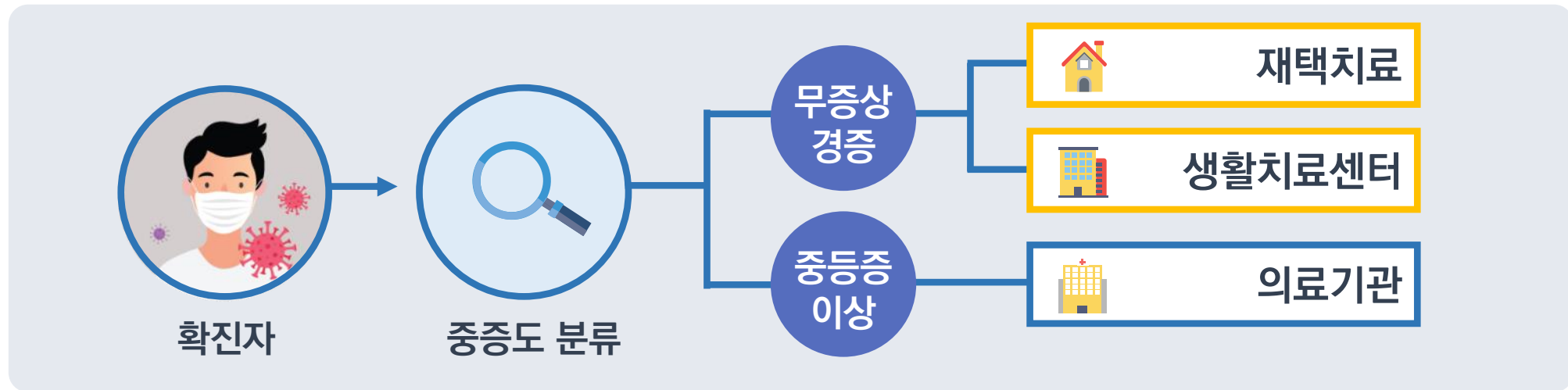
① 의료대응 추진방향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현행 의료대응체계 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	지역사회 의료자원 활용·협력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한 증상악화 환자 조기발견, 중증화 방지 -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신속한 진료 프로세스(“출발부터 진료까지”) • 생활치료센터는 재택과 입원의 완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별 전담센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증 환자에서 일부 중증환자까지 진료 - 분만, 수술 등 특수환자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외래진료는 1차의료 중심^(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치료제 개발 등 외래 진료 여건 갖춰지는 경우
경증			
중등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 정비 • 중중-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병상 사전파악, 폭발적 확산시 신속 확보^{circuit brea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진 교육, 원격 협진, 전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입원치료는 종합병원 등 활용
중증			

① 의료대응 - 재택치료

가)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재택치료

고위험군 제외한 경증·무증상
⇒ 전체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

생활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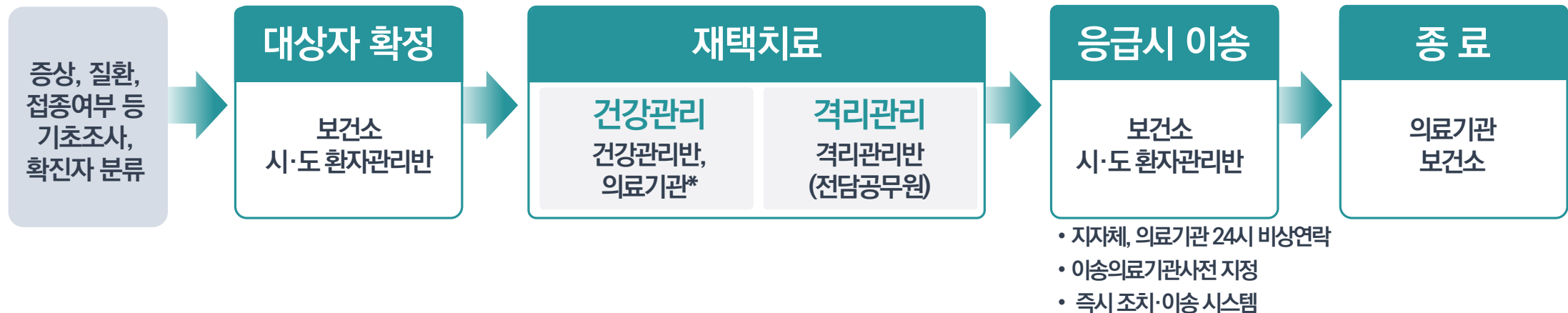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 감축

① 의료대응 - 재택치료

나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대상자	<p>무증상·경증 확진자</p> <p><small>* 제외 대상</small> -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 필요 환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노숙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p>
------------	--

추진 체계	<p>지자체 재택 치료관리팀* 신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p> <p><small>* (건강관리반) 보건소 + 행정인력,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 (격리관리반)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 활용, 격리관리 총괄</small></p>
--------------	---



① 의료대응 - 재택치료

다 재택치료 절차

	1일차	2~9일차			10일차
	① 대상자 확정	② 대상자 통지	③ 건강·격리 관리	④ 응급 시 이송	⑤ 종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조사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안내문 수령 생활수칙 교육 필요물품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결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 시 지자체 연락 필요 시 비대면 진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해제 해제 3일 차 폐기물 처리
지자체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 기초조사 ⇒ 시·도 환자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안내문 전달 생활수칙 교육 재택치료키트 배송 생필품 등 물품지원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배달 이탈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해제 안내 해제확인서 발급(필요시) 3일후 폐기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분류 및 대상자 확인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명단 송부 ⇒ 격리관리반,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 시 조치 (위치확인, 안심밴드 등) 이탈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정 가능 병상 확인 ⇒ 시·도 환자관리반 이송수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의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택치료 가능여부 사전검토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문진 실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필요시) 응급이송 판단, 이송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제여부 판단



HR(Home Recovery) Program for COVID-19 Patient

- 단기치료센터에서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치료

✓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환자는 원격의료 병원·앱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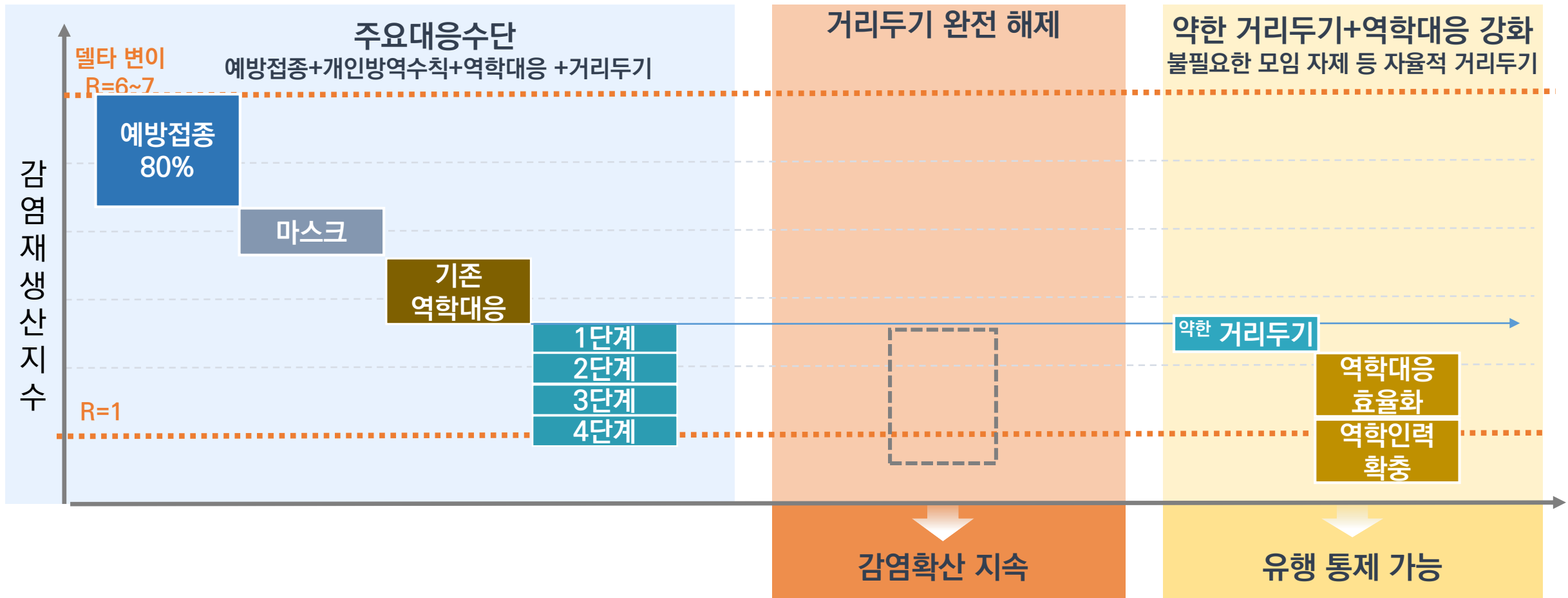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완료, 만 12세~69세, 경증무증상,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 독립된 방에서 자가 격리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취약자 없는 경우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회 온라인 바이탈 일지 작성, 증상 별 의료서비스 이용 권고 • 재택 회복 버디(HR Buddy) 배정 정기관리, Q&A, SOS,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 가족 구성원 등록(QO Registration of Household Contacts) 가족 구성원도 10일 간 격리 •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가 원격 의료 제공 병원과 원격 의료 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H의 원격 의료 e-트레이닝 및 조치사항 준수를 선언한 병원 또는 의료진 ✓ 언제든지 의사와 화상 상담 가능(24시간 상주), 비대면 배송을 통한 약물 전달(직접/약국)
일상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일차 자가 PCR 테스트 후 7일차 일상 활동 재개 또는 10일차까지 격리 유지
소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소독에 대한 지침 연결 QR코드/링크 제공
법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명령 위반 시 초범은 약 900만원 수준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 또는 모두



② 방역대응 - 역학대응의 중요성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가, 철저한 기본수칙 준수 뿐 아니라 자율적인 거리두기와 강화된 역학대응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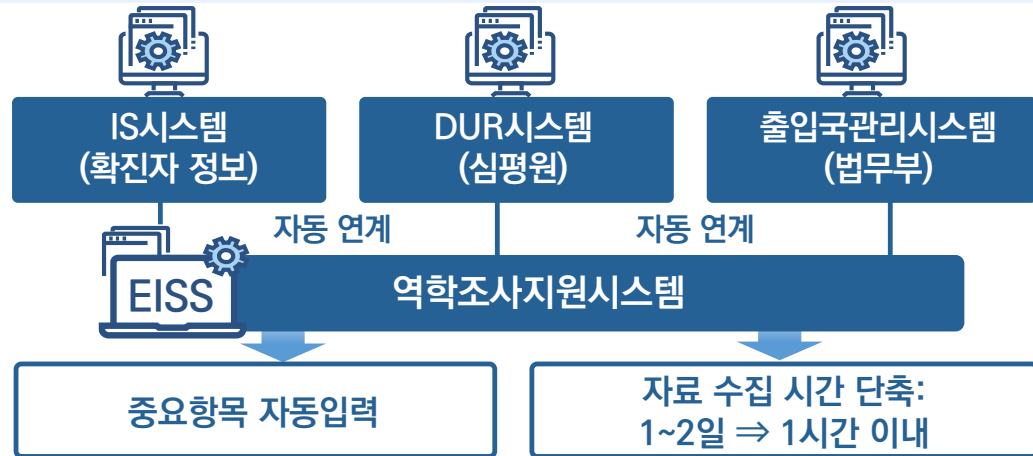
② 방역대응 – 역학대응체계 개편

☑ 위험도 기반의 역학대응체계로 개편

	현행		개선
중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원 포함 심층조사 (정확성, 완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촉자 추적·격리 (신속성)
감염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발현일 14일 전부터 (모든 확진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성 낮은 경우 생략 또는 기간 단축 가능 (지역별 유행수준 및 방역역량 고려하여 자율 선택)
접촉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접촉자 전체 (기간) 증상발현 후 격리 전까지 전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우선순위 집단 먼저 신속 조사 - 1순위(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24시간 이내 (기간) 증상발현 후 최대 5일까지 * 증상발현 -2일~+5일 사이에 대부분 전파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8-9일차 PCR 검사 실시) * 격리기간 변경 시 0.3~0.8% 이하 잔류 위험

② 방역대응 – 역학대응체계 개편

정보시스템 연계



- 심평원, 법무부 등 정보연계로 동선정보 정밀화,

바베이/기저지하 드 브서 지의

역학조사 효율화

- 필수항목 중심 조사 항목 정비
- Self Report 역학조사
 - 비상 시 자기기입 조사방식^{모바일} 적용
 - 역학조사 인력 조사원칙

Digital Tracing 고도화



- GPS 위치정보, QR코드 사용 확대로 잠재적 접촉자 신속 파악(반나절→5분 이내) 검사, 격리 권고
- 모바일 앱 또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험동선확인 시스템 추가 활용 검토

④ 방역대응 - 진단검사 및 신고

검사 역량 확충

- 검사인프라 추가 확대로 안정적 검사 지속
 - PCR검사역량 53만→65만
- 광범위한 무료 검사^{무증상자 포함} 유지
 -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추후 유료전환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방법 조정

- 접종완료자 선제검사 폐지 또는 완화
 - 검사대상 기관 축소, 감염취약시설 당분간 유지
 - 주기완화, 검사법 다양화 등
- 미접종자 선제검사 지속

검사 체계 효율화

- 전자문진표 사용^{임시선별검사소 포함} 등 검사 관리 효율화
- 검사의뢰에서 신고까지 자동 연계

검사량 급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 유증상자·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검사에 PCR 역량 집중 투입
-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 활용



4 방역대응

방역인력 확충 및 대응체계 정비

☑ 지자체 등 인력 확충

- 환자 발생에 따른 예비 인력 추가 확보
- 유행 상황 악화 시군구 지원 위한 광역단위 가칭신속지원팀 구성운영



☑ 모니터링 체계 정비

☑ 지속가능한 조사체계로 정비

검역 및 해외입국 관리

☑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 개선(4단계→3단계)

기존 국가별 확진자 비교 중심 평가지표를 예방접종률, 확진자 수 등으로 개편

레벨1
(안전국가)

- ① 비자제한 해제
- ②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레벨2
(일반국가)

- ① 비자제한
- ②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상반기)

레벨3
(위험국가)

- ① 비자제한
- ② 항공편 운항제한



* 입국 후 격리기간 조정(14일→10일)

IV

향후 계획



① 사회적 논의

| 사회적 논의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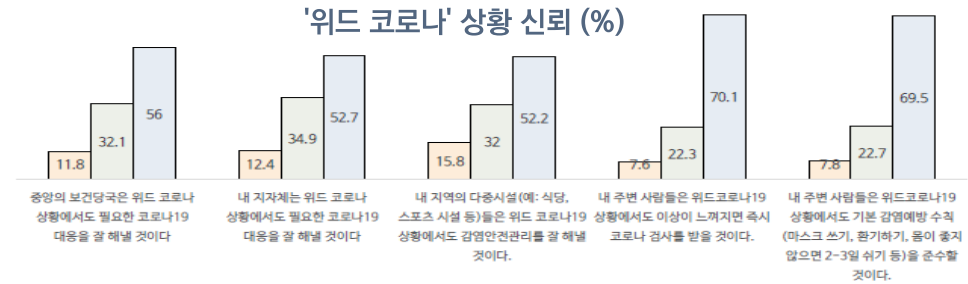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여 단계 전환과 관련 조치 전반에 대한 총괄적 정책 자문, 사회적 의견 수렴

| 대국민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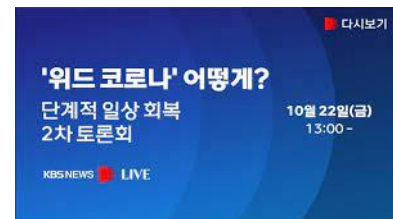
1차 전문가 토론회 ('21.10.13)



대국민 인식조사 ('21.10.5~8)



2차 전문가 토론회 ('21.10.22)



② 주요 일정



- 각 분과별 일상회복 관련 아젠다 심층 논의 및 추가 발굴

③ 통합적 단계적 일상회복

경제 민생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 기업 및 금융분야 이슈대응
- 고용노동 분야 이슈 대응 등 지원대책 마련
- 소비 측면의 코로나19 대응
- 주요국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사회 문화

- 학교교육 활동 확대 위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 사회문화업계 회복지원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
- 국민 일상회복 위한 문화치유
-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극복, 교육회복 지원

자치 안전

- 지역 사회 참여형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 지역 일상회복 추진체계 구축
- 골목상권, 소외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특화 일상회복 선도사업 발굴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감사합니다

